



[산업] 국내 SUV '춘추전국' 소형부터 대형까지 출격 준비 06



Life

[헬스·바이오] 남북간 보건의료 R&D 협력팀 통일비용 1/10로 L2



# ‘獨홀로코스트 공원처럼’ 일상 속 애국선열 추모장소로

## 서울시 ‘효창공원 구상안’ 발표

김구 선생,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 8인 문헌 곳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

일제가 훼손한 공간 범위 회복하고 역사·문화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결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 8명의 독립운동가가 잠든 용산구 효창공원이 오는 2024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되살아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쓴 많은 독립운동가가 문헌 곳”이라며 “이분들은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독립 운동하느라 자신의 목숨과 재산, 삶 그 모든 것을 바쳤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정신을 담아 효창공원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0일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효창독립 100년 공원 구상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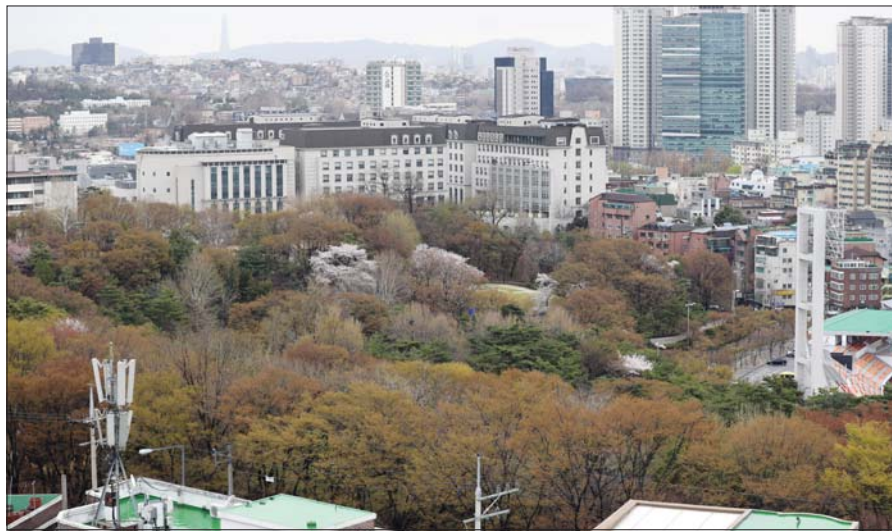
효창공원은 원래 조선 왕실의 묘역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사업 관련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효창원’이었다. 일제는 효창원에 골짜기와 유원지를 만들어 훼손했다. 묘역은 해방 직전 서삼릉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규모가 3분의 1로 줄었고, 도로로 단절되면서 섬처럼 폐쇄적인 공간이 됐다.

해방 이후 김구 선생은 효창공원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조성했다. 현재 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삼의사’와 임시정부 주석, 비서장, 군무부장을 지낸 이동녕, 차리석,



10일 오전 서울 효창공원 일대의 모습.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이 2024년 일상 속 애국선열 추모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연합뉴스

조성환 선생 등 8명(안중근 의사 가묘 포함)의 묘역이 있다.

서울시는 참배객 위주의 박제된 공간이었던 효창공원(총면적 16만924㎡)을 추모와 일상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한다.

우선 시는 독립운동가 묘역을 ‘일상 속 성소’로 만든다.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 프랑스 파리의 페르 라제즈 묘지공원과 같은 공간으로 조성

한다는 계획이다.

전면철거가 검토됐던 효창운동장은 공원과 하나 되는 축구장으로 거듭난다. 시는 60여년간 자리를 지켜온 한국 축구 역사의 산실이라는 가치를 고려해 이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독립운동가 묘역을 가로막는 스탠드, 조명탑 등 일부 시설을 없애고 운동장과 공원 사이 주차장과 도로를 녹지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일제가 훼손한 옛 효창원의 공간적

범위도 회복한다. 공원 담장을 허물고 주변의 역사·문화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손기정체육공원, 식민지역사박물관, 이봉창 의사 기념관, 경의선 숲길, 숙명여자대학교 등과 연결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동쪽으로 맞닿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지나 숙대입구역으로 이어지는 문화공연·전시 특화길(650m)을 조성한다. 남쪽에는 용산에서 태어나 효창공원에 문헌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 생가 터에 이봉창 의사 기념관(2020년 4월 준공)을 짓는다. 북쪽으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손기정체육공원은 2020년 6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연다. 손기정 체육공원에는 마라톤 마니아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587m 길이의 러닝트랙이 새롭게 깔리고, 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이번 효창공원 구상안은 확정된 것이 아닌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밑그림이다. 시는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 독립운동 관련 분야, 축구협회, 주민이 참여하는 ‘효창독립 100년포럼’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계획을 수립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자문단’ 출범

수질·환경·생태 등 전문가 12명 구성 깨끗한 물 공급 위해 협력방안 모색

서울시는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45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민간 지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은 수질·환경·생태·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남북협력·상수도·물순환 관련 서울시 담당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은 박 시장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논의했던 주제인 만큼 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이사업이 지자체간 남북교류사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서울-평양간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공동 이익이 되는 협력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자문단은 이번 사업을 토대로 ‘깨끗

한 물을 누릴 권리’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또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핵심 의제인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벚꽃에 내려앉은 봄비. 봄비가 내린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시그니엘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가 흐리다. /연합뉴스

## 서울시, 중증장애인 돌봄 범위 확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일상부터 긴급 상황까지 돌봄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최종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지원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편성한다. 기존 10개 복지관, 40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22개 복지관, 97명으로 늘린다.

장애인복지관 22곳 중 4곳은 최종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낮활동은 물론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까지 수행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시는 중증장애인의 주돌봄 제공자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에게 신속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곳에서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의 장례·결혼 등 경조사 참여,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입원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하루 8시간, 연 8회 최대 64시간 범위 내에서 긴급돌봄이 가능하다.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는 하루 최대 6시간·최대 3주 범위 내에서 계절 학교를 운영, 장애인 가정 에 과전하거나 돌봄 제공 가정에서 위탁 돌봄을 실시한다.

올 4월부터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낮시간 동안 교육, 훈련, 여가 등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배우처 지원 방식으로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전국 최초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이번 ‘안심대책’은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해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수립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에 총 25억 지원

9개 시군 등 총 11개 사업 선정

가평 ‘전통시장 상권활력을 위한 심(心)봉사 프로젝트’ 등 9개 시군·2개 공공기관의 총 11개 사업이 올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자리 정책마켓’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정책을 경기도가 구매(도비지원)해 시군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민선 7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1일~3월 8일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최종 19개 시군과 6개 공공기관 등 총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3월

26일 전문가와 참여기관이 모여 심의위원회를 열고 계획의 우수성, 추진의지, 독창성, 사업 적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가평, 김포, 남양주, 양평, 과천, 시흥, 군포, 포천, 안산 9개 시군과 경기도 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개 기관 총 11개 기관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시군 발굴 9개 사업에 20억 원, 공공기관 2개 사업에 5억 원 등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도는 이번 11개 사업수행을 통해 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선별하여 타 시군으로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